

2015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중 여성관련 정책 현황

☞ 2015년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해로, 지난 1월 17부 5처 5위원회 3청, 총 30개 기관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음. 이 중 20여개 기관이 여성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하고 있음.

☞ 20개 부처청이 업무보고에 포함한 주요 여성관련 정책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포함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 보육지원, 폭력 근절을 포함하는 인권 보호,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지원, 건강 및 안전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¹⁾

-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 이용자의 복귀 지원 관련 업무를 강조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주요 업무로 보고하였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대 방안을 보고하였고, 통계청은 2015년 2회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 작성 및 공표를 보고하였음.
-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경력복귀 지원을 보고하였음.
- 보육 지원 방안으로 기획재정부가 취업모 중심 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고용노동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직장어린이집, 군 어린이집, 농촌 보육지원 확대를 보고하였음.
-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보고하였음.
-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관련 지원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기초생활지원과 자녀양육지원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통계청은 2016년 양육 미혼모 통계작성을 예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암 검진 확대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경호르몬 관리 강화를 보고하였음. 안전에서 여성은 취약계층으로 접근되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교육 및 위해요소 진단을 보고하였음.
- 이 밖에,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양육·취업 관련 정보 제공 또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통일부와 외교부는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모자보건사업 확대를 보고하였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여성 과학기술인 인력양성 및 활용

-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지속 지원 (114명)
-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훈련(1,100여명) 강화 (경력관리, 리더십 함양 등)

교육부

교육부 여성관련 정책은 창의교육 분야의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있음

창의교육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자체·대학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제2의 경력 창출 지원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 성범죄 형(刑)·치료감호 확정자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하여 교단에서 원천 배제 ('15. 상·교육공무원법·국회 제출)
-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여 학생과 즉각 격리
-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 대비 강화(성폭행, 성추행 관련 사항은 최소 중징계 처리)

외교부

외교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행복한 임신과 출산〉

☑ 모자 보건사업을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지원



통일부

통일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 · 복지

〈행복한 임신과 출산〉

- 개성공단 호혜적 협력 거점 사업으로 발전(산업부, 복지부, 국토부와 협업)
 - 영유아 산모 통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
 - 국내 민간단체를 활용, 마을 단위로 영양, 보건 의료, 생활개선 등 통합 지원
 - WEP, WHO, UNIC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병행
 - 모자보건 분야(탁아소 확충, 의료보건 확대) 등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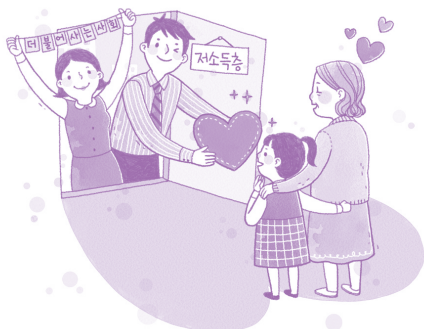
법무부

법무부 여성관련 정책은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가 있음

국민 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아동학대 · 성폭력 범죄 대응강화
 -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 본격화
 - 성폭력 · 살인 등 가석방출소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국방부

국방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 · 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있음

맞춤형 고용 · 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군인자녀 보육여건 개선, 군어린이집(24), 공동 육아나눔터(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 · 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으며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있음

맞춤형 고용 · 복지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육아휴직 시 업무대행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 및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3년), 업무대행수당 (월 5만원) 인상 추진 등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유아보육 · 교육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복지부), 어린이교육마당(교육부) 등 7개 시스템에 대한 협업 서비스 시행 추진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유연근무제 유형 통합 · 단순화(7개 → 4개) 등 자기 주도 근무여건 조성

기타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정부 안전종합대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으며 여학생 선호 운동 프로그램 확대 등 여성건강과 관련한 정책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신규 지원(5개)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시간제일자리 확대
 -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확대(할머니 2,100명을 6,000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유아 36만 명 수혜)

기타

- 여학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요가, 피트니스, 피구, 치어리딩, 탁구 등, 850개→1,000개) 및 여자어린이 축구클럽 육성(30개→48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030세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보육서비스 제공
 -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놀이교실(34개소), 주말 돌봄방(15개소)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14, 연 84만원→'15, 연 120만원)
 - 미혼 한부모가 실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강화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패키지 보급 및 취업지원 강화
- 위기노출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인력 대상 인권보호 폭력대응 교육 확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증설
- 다문화가정 자녀 중 중도입국 학생 등의 초기적응 지원 및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 레인보우스쿨 확대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 보육교사 양성체계(3급 과정, 사이버 학점은행 등) 강화, 인적성 검사 의무화, 근무환경 개선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의료비 걱정 없이 임신 출산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여성 및 고위험군 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 확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처벌 강화)
 -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시설 폐쇄 및 학대행위자 자격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 교사 원장 영구퇴출
 - 신고포상금 강화 등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경찰청 협조)
 -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CCTV 영상 열람권 제도화, 정보공시 강화(학대예방 교육, CCTV 설치 등)
 - 평가인증 부모참여를 강화하고 지표에 아동학대 예방 항목 확대 및 아동학대 안전인증제 도입(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보급)

기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17만명 → 463만명)에 대해 추후납부 허용 및 분할납부 확대(최장 24개월 → 60개월)
-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15.2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으며 여성 종사업종 안전 보건능력 강화 정책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여성 계속 일하기 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의 휴직 복귀 후 지급 비율 확대('15.7월)
- 아빠의 달 지원,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 및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한 부모 공동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최대 2년) 및 사용횟수(최대 3회) 확대('15.1. 관련법 개정)
-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상향
- 고운맘 카드 가입자 중심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임신 출산 단계부터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 홍보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구축

-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해소를 위한 규율 대상 확대(사업주→사용자 등) 및 사업장 감독 및 민간 상담협업 강화(고용평등상담실 지정 확대 등)
- 자치단체 협업모델 활성화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15년 20개소 확충 목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여성고용 질적 측면 반영, 적용대상 확대 등 추진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간호·은행업 중심으로 신규채용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채용 확대,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기관별 대표 직무 선정 적용 등 (공공부문이 선도)
- 대기업·중견기업, 공무원 중심으로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 본격 지원 확산
- 기존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 시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방안 마련·시행('15년 기간제 시간제 → 무기계약 시간제 전환 시 임금 일부 지원)
- 시간선택제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및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뱅크 확대
-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공공조달 등 우대방안 시행
- 가족친화기업 인증,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선정 시 우대(여성가족부 협력)

기타

☐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 여성 3대 업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 건강증진·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보급

법제처

법제처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다문화가족가족 적응지원 강화〉

- ☐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주는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생활법령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관련 정책은 건강과 관련한 주부 대상 HACCP 바로알기 교육 실시, 임신부 대상 환경호르몬 사용 관리 강화 등이 있음

기타

- ☑ 주부 등을 대상으로 HACCP 바로알기 교육 실시
- ☑ 의료제품 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관리 강화
- ☑ 의료기기(성형 미용 제품 등),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강화
- ☑ 임신부 생식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사용 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여성관련 정책은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 안전과 관련한 정책이 있음

기타

- ☑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진단 · 개선
 - 어린이, 노인, 여성에 대한 분야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 · 관 합동으로 교통법규 위반과 개학기 안전위해요소 단속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여성관련 정책은 창조경제 분야의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이 있음

창조경제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

- ☑ 투자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기업 및 지방기업 전용 투자펀드' 운용규모 확대 (여성기업 : '14) 100 → '15) 170억원)
- ☑ 위장 여성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방지를 위해, 여성기업 범위개편 및 위장 여성기업 제재근거 마련 ('15.6, 여성기업법 개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 · 복지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 · 복지

〈행복한 임신과 출산〉

- ☑ 생애주기별 국민맞춤서비스 제공
 - (임신 · 출생) 임신확인 시 무료건강검진, 출산용품 지원 등 통합 안내
- ☑ 창업 · 육아 · 생활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확대
- ☑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 집중형 근무 및 회의시간 단축 등 자기주도형 근무 정착 및, 아빠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활용을 활성화 하여 가족이 있는 삶 실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 · 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 · 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 ☑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한부모 가정 등)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주는 원스톱 생활 법령정보 서비스 실시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외국인 · 결혼이민자 등의 공직임용을 통해 사회 정착 지원, 소속감 고취 및 사회구성원의 공직대표성 강화



통계청

통계청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양육 미혼모 통계작성

- 등록센서스 추진을 위해 만든 인구·가구 DB를 활용한 양육 미혼모 통계작성 제공('16.9월)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 작성 및 공표

- 시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성, 자발성 및 근로조건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통계 작성·제공('15. 5월, 11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와 국민안전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 한부모가족 등 양육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단계별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 위기노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한 총괄·조정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추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가정·지역사회 양육지원 강화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및 재취업 활성화

-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및 복귀 지원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 취업지원 서비스 질 제고 및 이용 활성화

- 취업 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
-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전후 연구개발(R&D)지원으로 창조경제 확산(중기청 협업)
- 일자리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정책모니터링 실시로 현장 목소리 반영

- 가족친화지수를 일가정양립 중심 지표로 개선, 동아시아 적용가능한 「가족친화 국제지표」 개발 및 국제적 확산

- 생활밀착형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운영

☑ 양성평등 윤리 문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양립지원 강화 등)

-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

- 여성 사회적 지위 반기별 향상도 측정(30대여성 고용률, 전문직 여성비율 등)

- 정책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테스크포스」 운영 활성화

- 「양성평등 주간」 운영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의식 확산(방송 및 보도 분야 대상 양성평등상 시상 등)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 여성인재 확충 및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제15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화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폭력 예방체계 강화

- 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온오프라인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구축

-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집행력 및 처벌 강화

☑ 폭력피해자 지원 내실화

- 인프라 개편·확대로 신속·편리한 지원

- 3개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 센터'로 일원화
-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대
- 피해자 자립 기반 확대
- 군대 및 대학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성화
 - 교재 및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보급, 전문 강사풀 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기타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위안부 피해자 건강지원

❏ 정부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은 2014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세부직종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형별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개발·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2015년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남성의 육아휴직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2014년 시간제 보육, 초등 1·2학년 돌봄 서비스 등을 주요 업무 보고에 포함하였지만, 2015년에는 취업도 육아지원 이외에도 어린이 집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대책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음. 또한, 2014년과 다르게 안전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안전 위해 요소 개선 및 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도 보여짐. 이 밖에 미혼 한부모 기초생활보장,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 확대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 여성 암 검진 확대,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납부제도 변경, 여학생 생활체육프로그램 확산, 군대 및 대학 성범죄 예방 등 그간 성 평등 정책 확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현안이 부처의 주요 업무로 추진될 예정임.

❏ 특히, 2015년은 여성정책의 근간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7월 1일 시행)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원년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해 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경